

지방의회 중계석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11일 김범일 대구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대구 시립화장장 시설확충방안과 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이동희 의원

첫 질문에 나선 이동희(교육사회위원회·수성구4) 의원은 "화장로가 8기에 불과한 대구시립 화장로로는 55%에 육박하고 있는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화장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구시립 화장장 확장 및 시설현대화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립 화장로 8기는 부산·인천 15기, 서울 23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난 8월 유골이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시설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시립 화장장이 화장 잔여물(분진)을 저장고에 보관해오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받자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

겨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 유골잔여분 처리의식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범일 시장은 "오는 2012년 12기, 2020년 22기의 화장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지확보 및 장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규용 의원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정규용(행정자치위원회·남구1)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중구와 남구 서구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검토를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건축 승인된 대구지역 아파트 건축도급건수의 65%가 외지업체가 차지해 주택건설시장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시립화장장 시설확충 방안은

배제되고 있다"며 사업개시 전에 지역 업체(2군 이하)의 공동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김 시장은 "종세분을 위한 재정비는 2007년 제8차 도시계획정비때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으며 1종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은 건교부 지침상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김범일 시장과 대구시의회의 유일한 4선 의원인 강황 전 의장이 지역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시책임론을 둘러싸고 거칠게 공방을 벌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충질문에 나선 강황 의원은 "대구시가 승인한 80개 아파트 재건축사업 중 대구업체에 승인한 것은 15개에 불과하다"며 대형 외지업체가 대구지역 노른자위만을 골라 재개발한 뒤 재건축재개발 시장

이 싸늘하게 식은 현실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 시장은 "제도인데 시가 승인을 안 해 줄 방법이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이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4개 아파트 건설에서도 지역 업체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지역 업체 육성방안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자 김 시장은 "대안제시를 갖고 논의하자"며 질문내용을 '비판을 위한 비판'식으로 몰아가는 듯 했다. 이에 격분한 강 의원은 미분양아파트가 7천 세대에 이르고 255개 동에 정비업체가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미진한 현실을 들어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위한 대구시의 각종 지원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때늦은 대책"이라고 일축하며 질문을 끝냈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